

세자 편의 제공 및 전자시정 구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5. 결 론

지방자치의 본격화에 발 맞추어 지방세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시와 제도의 개선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즉 투명하고 정직한 지방세정의 정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난 98년부터 지방세정의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고, 이를 통합관리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416만 건에 이르는 재산세, 면허세 등의 정기분 세목에 관한 모든 세정정보를 전산화하여 이를 토대로 체납세의 체계적인 관리, 자치구·군과의 세정정보 교류 등 지방세정분야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지방세정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책은 시민의 납세편의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시책의 추진에 개선·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

전산화를 통해 모든 세정관련 자료가 광역적으로 활용되고 처리되는데 비해 지방세 제증명, 독촉고지서 등은 자치구·군내에서만 발급되도록 되어 있어 전산화가 100%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구축된 재정정보시스템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망(부동산 등기, 자동차, 금융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의 교류가 확대 되어야 할 것이며,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UIS와의 연계를 통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세원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관리 전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자 및 경영진에게 재정정책정보 및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여 재정수지에 대한 분석, 평가,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세정의 정보화를 통한 세정의 능률성과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시책들을 많이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금년 7월1일부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개발 운용되는 세정관련 시스템의 통합적인 연계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증가될 지방세정의 정보화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